

북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향 모색*

민경태 (재단법인 어시재 팀장)

-
- I. 북한의 변화와 성장 모델의 전환 필요성
 - II.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건설 가능성
 - III.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항만 거점도시 육성
 - IV. 국제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개발
-

〈요약〉

북한은 최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 경협방식도 과거와 같이 북한 노동력에 의존하는 모델이 아닌, 첨단 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준비해야 하며 북한의 인재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은 남북한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서 남한의 IT 및 제조업 경쟁력과 북한의 고유한 장점을 접목할 경우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한반도의 도약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경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이 발표한 27개의 경제개발구를 바탕으로 중소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항만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SOC 인프라 구축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북한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본 글은 아래와 같은 필자의 저서 및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미래의창, 2018).

“‘동일비용’은 없다.” 「경향신문」, 2018년 11월 9일.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 「프레시안」, 2019년 2월 13일.

I. 북한의 변화와 성장 모델의 전환 필요성

1.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평양의 건물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도착한 후 숙소인 백화원으로 가는 길, 김정은 위원장이 카페레이드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고층건물로 새롭게 조성된 여명거리가 아니었을까. 북한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평양의 자부심과 변화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평양을 방문한 인사들에게 새롭게 변모한 거리 모습과 상점, 교육시설 등을 보여주는 데 적극적이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능라도 5.1 경기장의 집단체조공연 '빛나는 조국'에서는 약 200여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쇼를 연출했다. 비록 하드웨어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한글로 드론쇼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양을 방문한 인사들이 학생소년궁전 및 평양교원대학 등 교육시설을 견학할 때 물고기 홀로그램 영상, 로봇 제작 및 구동 장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교육 도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매우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

〈그림 1〉 북한의 드론쇼



출처: “드론 전문가가 본 北드론쇼… ‘선진국과 견줄 수준’,” 『머니투데이』, 2018년 9월 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평양을 방문한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평양 시내의 정치적 구호들은 거의 사라지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¹⁾와 같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구호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한 회의 내용, 언론 보도, 선전 구호 등에서는 과학 기술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18년 4월 2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 “김정은 위원장에 ‘개방과 성장’ 자문할 경제고문 파견을,” 『매일경제』, 2018년 10월 14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11일 밤 시내의 여러 명소를 참관했으며, 특히 “싱가포르가 들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그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동력은 그동안 서서히 축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은 해외에서 첨단기술, 시장경제 및 기업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경제 개혁과 개방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까지 8년 동안 꾸준히 북한의 주요대학 교수들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파견하여 경영학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고 한다. 최근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북한의 주요 대학 총장단은 영문 원서로 된 경영학 교과서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시장경제 및 기업경영 관련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싱가포르의 NGO인 ‘조선 익스체인지’를 통해 북한의 관료들에게 시장경제 및 기업경영 관련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스웨덴의 학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북한의 수강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왔다.

2. 기존 남북협력 모델의 한계

기존의 남북한 협력은 상호보완적 경쟁력을 활용한 것으로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및 자본이 결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대표적인 협력모델인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가장 성공적 사례이다. 개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어느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임금 수준을 갖추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단기간에 북한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 경제제재 완화 시 가장 먼저 재개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 방식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속될 수는 없다. 북한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의 협력 모델은 점차 지양해야 한다.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북한의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개성 공단 협력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가. 인간 노동력 기반 성장에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노동을 효율화하고 공장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국도 앞장서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자동화가 용이한 공정에서부터 인간 노동력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 노동력에 의지하는 단순 임가공 형태의 제조 방식은 곧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의 노동력을 단순 활용하는 것을 넘어 다음 단계의 협력방식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임금 경쟁력은 영원하지 않다

비록 현재 북한의 임금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임금 수준도 점차 올려야 하며,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내수 시장의 소비도 진작시켜야 한다. 북한을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조기지로 부터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력만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의 협력 모델은 점차 지양해야 하며,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북한의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지식기반 산업과 4차 산업 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과 지식기반 산업 분야의 협력 모델로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과 자원,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서로 결합하는 상호보완적 협력은 초기 단계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과 자원 기반의 산업이 아닌, 지식기반 산업 또는 첨단 4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을 추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인재양성 중심의 산업발전 모델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의 협력모델이 대안이 되어야 할까? 북한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에 바탕을 둔 남북 협력 모델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기간에 결과를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씨앗을 심어서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 기업 - 학계 등이 모두 연계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연구, 기술 개발, 창업 등이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최고의 자원인 ‘인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자체적인 미래성장 동력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모든 산업 협력 과정을 인재 양성과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개발하더라도 학교와 연구 단지를 함께 구성하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학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연구소에서 진행된 R&D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산업과 학교,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가치 사슬이 지식 생태계의 핵심이다. 기업이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와 인력을 기업이 다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등 벤처기업의 창업 과정에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학교와 연구기관을 지식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이과대학과 같은 북한의 주요 이공계 대학과 글로벌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주요 지역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국책 연구소와 협력을 추진하고 해당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연구소 등이 연계되어 남북한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혁신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에 추진하기는 부담이 되므로, 우선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중심으로 지식 생태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우수 대학의 분교 설립, 남북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북한 인재 육성을 위한 남한 기업과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을 통해 R&D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지 첨단기술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북한 자체의 인재 양성을 병행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하자원 개발이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원 개발 기술 인력이나 관광·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향후 성장 방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산업발전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II.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건설 가능성

1. 4차 산업의 도래와 남북협력 방식의 전환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제조업의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 국가들은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의 산업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를 주목해야만 한다. 어찌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남북 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지도 모른다. 70년대 개발도상국으로 성공했던 한국의 경험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경제의 전반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고도 성장기에 섬유, 신발 제조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우선 육성한 후, 자동차, 기계, 화학, 조선, 중공업 등 대규모 설비장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결과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되는 반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발상과 정책이 시급하다.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지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 방향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이다. 독일은 스마트팩토리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우위를 지키려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로봇기술에 집중하여 ‘로봇신전략’을 바탕으로 산업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산업 인터넷과 클라우드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바탕으로 제조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첨단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의 영향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사회 활동과 산업 분야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우리의 생활과 산업 활동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여 ‘빅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분석하여 다시 실제 생활과 산업의 운영에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의 핵심적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전환은 거의 모든 산업과 생활에서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즉,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항구는 스마트항만으로, 농장은 스마트팜으로 전환되듯 우리의 생활과 산업의 전 분야가 ‘지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의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과거 70년대에 개발도상국 발전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던

과정으로 그대로 북한에 도입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없다. 북한이 가진 특수한 장점은 바로 옆에 많은 경험을 가진 남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방식도 변화하는 기술발전 상황을 고려하려, 한반도 성장전략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도시 개발 분야 남북한 협력의 잠재력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도시 설계와 건축을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한다. 2012년 집권한 직후 평양건설경제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해외에서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건축 관련 정보를 실무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새로운 방식의 건축 설계를 독려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국가의 건축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업소와 평양건축 종합대학의 공동 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신도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평양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거리를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완공된 창전거리에는 주상복합 형태의 고층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지하에는 상점, 백화점, 식당, 목욕탕, 이발소 등의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의 교육시설과 공공시설도 갖춰져 있다. 2015년 11월에는 중구역 대동강변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준공되었다. 과학기술자들이 거주하는 수천 가구의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하여 150여 개의 상업 시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기상수문국, 백화점, 탁아소

등이 이 지역에 들어섰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여명거리는 2017년 4월에 완공되었다. 이곳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살게 될 주거시설과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의 개혁·개방과 도시개발 사례도 눈여겨 보아 왔다. 특히 홍콩과 선전을 포함한 주장(珠江) 삼각주 경제권의 발전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북한이 경제특구·개발구 모델을 통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점이 많다. 북한의 눈높이는 이와 같이 선진 도시개발 사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단순히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도약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선진화된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할 것이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도시 개발에 대한 남다른 아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단지 '이밥에 고깃국' 먹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북한을 동북아의 선도적 산업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꾀력한 것이다.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남한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신도시 건설 경험과 전자정부 운영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물인터넷, 5G 차세대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에 융합하여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신도시 건설은 남북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산업은 이제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북한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스마트시티 개발 및 경영을 미래 한반도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중국

선전의 발전이 30년 걸렸던 것을 북한의 해주와 개성은 10년 내에 이룰 수도 있다.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스마트시티 건설, 남한보다 북한이 유리한 이유

인간의 삶과 산업을 담고 있는 공간적인 ‘그릇’은 도시이다. 미래의 도시는 4차 산업을 담게 될 것이며, 이를 ‘스마트시티’라고 개념을 정의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 4차 산업을 적용하여 첨단 기술 기반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흔히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남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북한에 비해 남한의 경제와 기술 발전 수준이 높으므로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성장 방식이 기존 개발도상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혁명으로부터 한반도의 미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삶을 담는 그릇인 도시의 모습도 점점 진화해가고 있다. 한반도에도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스마트시티를 남북한이 함께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들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류·교통·에너지 등의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첨단기술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도약적 성장을 이뤄낼 무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창조적 혁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는 남북한의 경제가 통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 북한에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의 통합된 한반도,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와 다름없다.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북한에 첨단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가. 첨단 인프라 구축의 효용 가치가 높다

인프라 구축은 건설 기간이 길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도 투입되어야 한다. 남한에는 에너지·교통·통신망 등 주요 인프라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 기술만을 고려하여 기존 인프라를 해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한반도 경제 시스템의 수익성 관점에서 효율적 이지 않다. 남한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려면 기존 인프라를 해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현재 매우 미비하고 열악해서 부분적 개선보다는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남한의 인프라 수준보다도 훨씬 앞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시스템을 북한에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 경제권의 관점에서 효용 가치가 높다.

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당의 결정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북한이 지정한 27개의 경제 특구 및 개발구에는 별도의 법률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과 투자 자본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목표를 가진 스마트시티를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의 신도시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의 경우 법률과 제도 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 토지 보상이나 건설 비용이 적게 든다

북한에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없으므로 토지 수용 문제나 보상에 대한 부담이 남한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남한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상황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비용도 남한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골재나 자원이 국가 소유이며, 대규모 토목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노동력에 군 병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이상적 도시 모델을 구현해 볼 수 있다

남한에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토지 매입비용이 막대하므로 반드시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범도시를 설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상업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기존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자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신도시의 상가 지역에는 용적률을 최대로 하여 임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건물들로 채워져 있다. 반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사업성이 낫다 해도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미래 지향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남한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 모델을 우선 북한에서 구현해 볼 수 있다.

마. 시장과 산업 기득권의 저항이 없다

남한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과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주도적인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기술의 혁신성만으로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또한 새로운 첨단 시스템을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스마트시티에 자율 주행차,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첨단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운수업 노조, 의료 관련 협회, 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반면 북한에서는 아직 시장과 산업 기득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책적 결정을 통해 신도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남한의 혁신 기업들이 북한에서 첨단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III.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항만 거점도시 육성

1.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북한은 2018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들〉이라는 책자를 외국문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이 자료에는 북한의 27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위치, 면적, 업종 등 주요개요와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8개의 경제개발구를 중앙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라선 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강령 국제록색시범구,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진도 수출가공구 등이다.

북한은 이 자료의 서문에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투자 관련법과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일부 법규를 수정 보완하였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경제지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의 경제지대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여 북한식 경제지대를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경제개발구 투자에 대한 혜택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투자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권리와 이익, 신변안전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SOC 인프라)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상품 생산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기업의 위치 선정 시 우선권을 제공하고 토지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며, 이윤을 재투자하여 자본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 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대한 기업소득세 50%를 환급해 준다. 하부구조건설 분야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대한 기업소득세 전부를 환급해 준다.
- 경제개발구의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분야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 임대기간은 최고 50년이고, 기업소득세는 결산 이윤의 14%인데 장려부문은 10% 이다.
-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이며, 경제개발구 건설용 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 등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및 경영용 물자와 수출상품, 투자가가 사용할 생활용품 등에는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북한이 제시한 27개 경제개발구의 위치 및 육성 대상 산업은 〈그림2〉 및 〈표1〉과 같다.

〈그림 2〉 북한의 27개 경제개발구 위치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표 1〉 광역경제권별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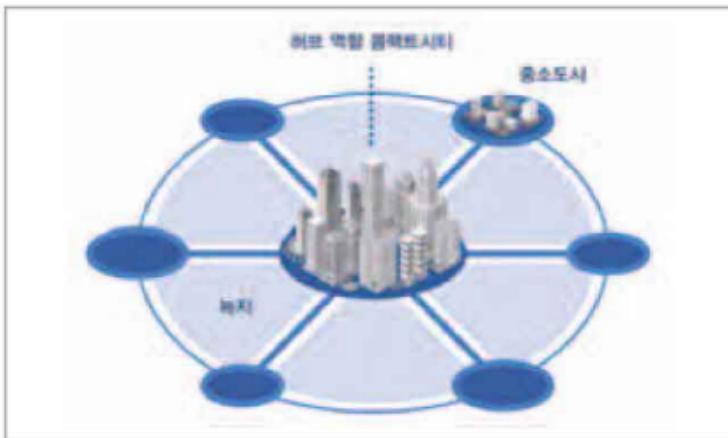
광역경제권	행정구역	경제개발구	육성 대상 산업
신의주 – 단동 – 압록강(6)	평안북도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
		압록강 경제개발구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자강도	청수 관광개발구	압록강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봉사
		위원 공업개발구	광물자원, 목재가공, 기계설비, 농토산물가공
		만포 경제개발구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평양 – 남포 – 숙천(7)	평양직할시	온정 첨단기술개발구*	정보기술, 나노·신소재, 생물공학, 첨단기술
		강남 경제개발구	선진영농, 농축산, 첨단제품기공·임기공
	남포직할시	와우도 수출가공구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
		진도 수출가공구*	기계, 전기, 전자, 경공업, 화학제품 생산수출
	평안남도	청남 공업개발구	채취설비, 공구제작, 석탄화학제품, 대외무역
		숙천 농업개발구	육종, 채종, 농산, 수산, 과수, 니파, 버섯 생산
	황해북도	송림 수출가공구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해주 – 개성 – 인천(2)	황해북도	개성 공업지구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개발
	황해남도	강령 국제록색사시범구*	록색상업기술 연구개발, 유기농수산물가공
두만강 – 청진 – 나진(5)	함경북도	나선직할시	증계수송, 무역·투자, 금융, 관광, 봉사
		온성섬 관광개발구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관광봉사
		경원 경제개발구	전자제품, 수산물, 정보산업, 피복, 식료, 관광
		청진 경제개발구	금속, 기계, 건재, 전자제품, 증계수송, 무역
	어랑 농업개발구	농축산기지, 농업과학연구개발	
백두산 – 단천 – 흥남(4)	양강도	무봉 국제관광특구	백두산 관광 종합봉사, 관광상품 생산
		혜산 경제개발구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함경남도	북청 농업개발구	과수업,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흥남 공업개발구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제품, 기계설비제작
원산 – 금강산 – 양양(4)	강원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국제 휴양·치료관광, 역사유적관광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금강산 관광
		현동 공업개발구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업
	황해북도	신명 관광개발구	명승지 유람, 탐승, 휴양, 체육, 오락 관광봉사
합계 (28)	중앙급 경제개발구(8) + 지방급 경제개발구(19) + 개성공업지구		

주: *표는 중앙급 경제개발구, 중앙급 경제개발구(8)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19)에 개성공업지구를 추가.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경제권별로 재분류함.

2. 중소도시 네트워크 구상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적합할 것인가. 우선 대도시 모델과 중소도시 모델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탄생하여 발전하였다. 산업혁명은 농업시대 경작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던 인류를 도시로 이동시켜 공장과 기업에서 근무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거대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모여 단체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또한 도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단위가 아닌 대규모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 병원이 세워지고, 물품 구매와 유통을 위한 대형 상점 등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림 3〉 광역경제권의 허브와 주변 중소도시 네트워크



출처: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서울: 미래의창, 2018), p.124.

도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대도시로의 집적화는 점점 가속화되었다. 대도시의 집적화를 통해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도시가 비대화되고 집중화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대기 오염, 사회 문제 등 대도시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산업혁명은 대도시를 만들어준 원동력이나, 정보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미래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 즉, 대도시가 주는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쾌적한 중소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대안적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대도시는 직업,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문화적 공간과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 준다. 특히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하는 암묵지의 형성이 필요하다. 도시는 문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일수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시의 크기가 10배 증가하면 창조성은 17배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도시의 생산성과 창조성은 인구나 면적에 비례하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대도시가 주는 편리함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춘 중소도시의 장점을 결합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허브 역할을 하는 콤팩트시티와 주변의 중소 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진 광역경제권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소도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광역경제권에서 허브 역할을

2) “하루 2시간 걸리는 출퇴근, 스마트도시로 대폭 줄이자,” 『중앙일보』, 2018년 5월 3일.

하는 콤팩트시티가 대도시 규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 서비스 기능을 보유하도록 하여, 주변의 중소도시에 살면서도 대도시의 기능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3〉에서와 같이 광역경제권의 중심 지역, 즉 중소도시 네트워크에서 허브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은 친환경적인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콤팩트시티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의 중소도시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다. 도시 기능면에서 예를 들자면, 허브 역할 콤팩트 시티에는 의료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메디컬 센터를 배치하면,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들에게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콤팩트시티에 교육 기관의 허브 역할을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를 배치하고, 중소도시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교육을 받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항만 거점도시 육성 방향

남북한은 모두 산악 국가이며 특히 북한 지역에는 대부분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인구가 집약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서해안의 일부 평야지대 도시나 동해안의 항만 주변 해안도시이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양 국가로서, 거의 모든 도시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동하면 바닷가에 닿을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와 비교할 때 한반도의 도시들은 사실상 모두 '해안도시'라고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지형과 인구 분포를 감안하면, 한반도의 광역경제권은 해안을 따라 벨트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각 광역경제

권은 하나 이상의 중심항만을 보유하고,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27개 경제개발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광역경제권 개발 전략에 포함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미래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주요 거점 도시로 가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함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항만 거점도시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북한이 제안한 경제특구·개발구와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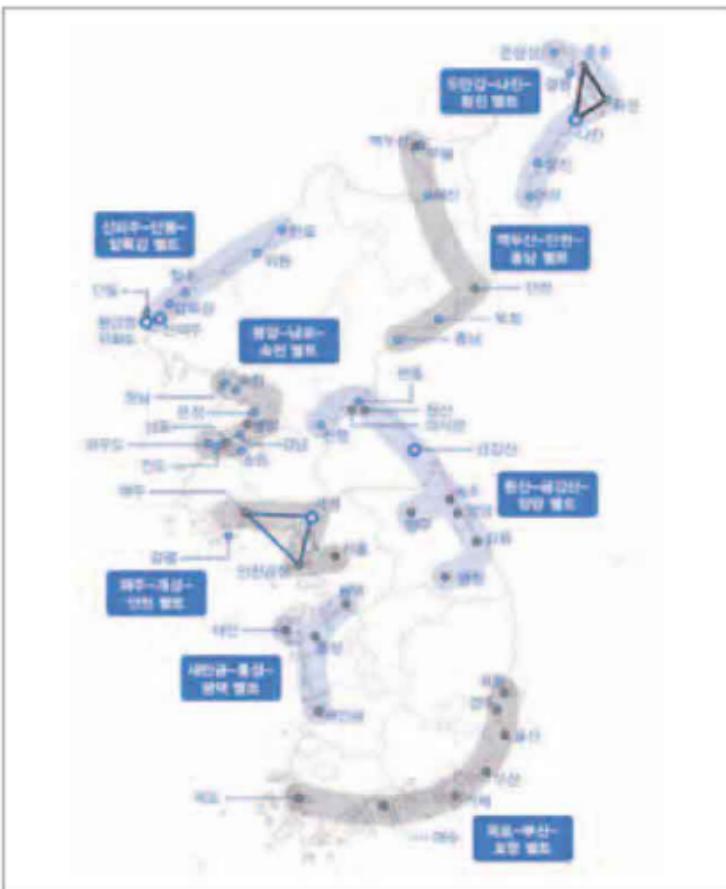
북한은 자체적으로 27개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해당 지역을 광역경제권의 중요 거점도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씨앗'으로 삼아 스마트시티 벨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개발구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상 해안도시와 항만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도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와 환황해 경제협력 벨트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제시한 경제개발구도 대부분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주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시티 벨트에서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거점항만을 선정하여 광역경제권 차원의 해양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철도·도로·에너지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그림 4〉 한반도 8대 광역경제권 구상



출처: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p.213.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가 물류와 교통의 중심으로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스마트시티 벨트가 복합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허브도시를 보유해야 한다. 허브 도시는 철도, 도로, 에너지망 등 육상 네트워크와 공항, 항만을 효율적으로 연계시켜서 물류 및 교통의 중심으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마트 항만, 스마트 도로·철도, 자율주행차·선박·드론 등 첨단 물류·교통 시스템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IV. 국제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개발

1. 통일 비용이 아닌 인프라 투자 비용³⁾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항상 ‘통일 비용’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항상 여기에 짓눌려 있는 듯하다. 남북 간 화해 무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을 위한 세금을 또 걷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통일비용은 없다. 과거 보수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여러 미디어를 통해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서독의 경제적 부담이 과장되어

3) 필자의 기고문 “‘통일비용’은 없다,” 『경향신문』, 2018년 11월 9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비용에서 철도, 도로 건설 등 직접적 SOC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것은 약 12%에 불과하다. 50% 이상은 모두 동독 주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다.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흡수통일이 되다보니, 동독 주민에게 서독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과 복지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흡수통일은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만약 흡수통일이 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를 적극 피해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제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적 격차를 서로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남북한 통합 과정은 우선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세대가 통일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흡수통일이 아니라고 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 SOC를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개별 기업의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투자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과 베트남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과 같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두고 어느 누구도 해외에 '퍼주기'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기업은 이익이 되는 곳에는 어디든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별기업의 투자는 통일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산업단지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별기업이 투자하기 전에 최소한 산업단지에 전력과 용수, 교통, 통신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 및 국제 자본이 함께 진출하는 컨소시엄도 해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초기 투자비용 부담만 감당할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인프라 비용까지 투자하고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상당기간 사업의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인프라 구축비용도 충분히 조달가능하다. 초기 투자시점과 이익창출 시점 간의 시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키지딜'을 구성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일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한반도의 대동맥 구축비용이다. 철도, 도로, 에너지, 항만 등 주요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대기업 차원에서도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남북한을 관통하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태평양 해양세력의 접점에 놓인 한반도에 지리경제학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배를 타고 부산항과 목포항에 와서 기차로 갈아타고 서울, 평양, 북경, 모스크바, 유럽까지 여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항만도시들은 유라시아의 관문으로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SOC 인프라 구축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며, 미래의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한국 경제의 자체 역량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의 부담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주도하는 '북한개발은행(가칭)'을 투자의 플랫폼으로 설립하고 여기에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는 형태도

구상해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국제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발 전략을 관掌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며, 여기에는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경험이 없는 북한이 무분별한 해외자본의 공략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교훈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남한은 우호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파트너임을 북한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2. 국제협력을 통한 SOC 인프라 재원 마련⁴⁾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합의와 실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개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점점으로서 한반도의 지경학적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대동맥, 즉 북한의 SOC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것을 단지 북한에 대한 투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민경태,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 「프레시안」, 2019년 2월 13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지정학적 대전환이 일어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그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림 5〉 한중일 3국이 협력하는 북한 경제개발 구상



출처: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

북핵 문제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 SOC 인프라 건설과 투자에 실제로 관심이 높은 나라는 한중일 3국이다. 그동안 ‘섬나라’ 신세였던 한국은 북한을 지나는 육상교통망을 통해 비로소 유라시아 대륙 경제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마주하는 중국은 북한 개발이 중국 동북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적극적이다.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일본도 전쟁 배상금 문제가 합의되면 일본 기업의 북한 투자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3국이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통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3개의 축으로 나누어 한중일 3국이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은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평양 이남의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구간의 건설을 담당하고, 중국은 접경지역 단둥에서 신의주를 지나 평양까지 연결되는 평양 이북의 경의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구간의 건설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원산에서 평양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반도 주변국가의 북한 산업단지 투자⁵⁾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SOC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은 인근 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新경의선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개성과 해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인천공항을 포함한 서울·경기권과 연계하여 이 지역을 한반도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한강 하구 접경지역의

5) 민경태,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한의 물류와 교통을 연결하는 것이다. 해주-개성-인천 삼각벨트는 중국 주장삼각주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중국은 단둥과 신의주를 연계하여 북·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신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신암록강 대교를 완공하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새로운 해관 건물과 호시 무역구(互市貿易區)를 건설하여 북중 무역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원산항과 일본의 주요 항구를 잇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는 접점을 얻게 된다. 원산 주변에 일본 기업의 산업단지와 일본인 거주 지역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원산항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국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절실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아 국제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개발구의 투자 및 경영을 한중일 3국에 위탁할 경우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선진시스템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투자에 참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이면서 북한 경제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혹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전략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접점이다. 양쪽 세력이 대립하던 곳을 평화적 교류와 번영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발상을 전환하자. 북한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리고 얹혀서 발전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다자간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서울: 미래의창, 2018).
- _____, “김정은 위원장에 ‘개방과 성장’ 자문할 경제고문 과견을,” 『매일 경제』, 2018년 10월 14일.
- _____, “‘통일비용’은 없다,” 『경향신문』, 2018년 11월 9일.
- _____, “드론 전문가가 본 北드론쇼…‘선진국과 견줄 수준’,” 『머니투데이』, 2018년 9월 20일.
- _____, “북한은 한반도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미래다,” 『프레시안』, 2019년 2월 13일.
- _____, “하루 2시간 걸리는 출퇴근, 스마트도시로 대폭 줄이자,” 『중앙일보』, 2018년 5월 3일.

